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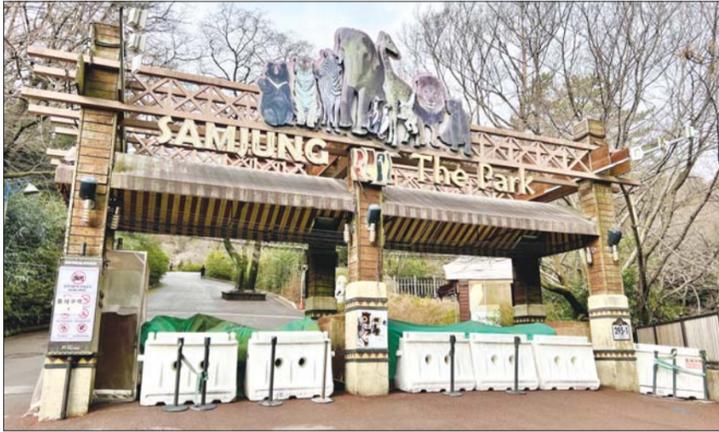
부산 유일 동물원 '삼정더파크', 내년 공립체제로 재개장

부산시, 약 478억 매매계약 예정 제1회 추경에 운영비 75억 편성 '생명존중 동물원'으로 비전 설정

부산시는 부산에서 유일한 동물원인 '초읍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삼정더파크)'을 인수하여 공립동물원 체제로 전환 2027년 재개장하기로 했다. 6년간 이어진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민간 운영을 공공 책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5일 부산진구 부산어린이대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광역시에 걸맞는 뛰어난 동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4월15일 478억2500만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해 직접 관리·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원을 편성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삼정더파크.

새로 출범하는 공립동물원은 정비를 거쳐 2027년 정식 개장한다. 규모는 8만5334㎡로 현재 동물 115종 443개체가 있으며 추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비전은 '생명을 존중하는 동물원'으로 설정했다. 자연 지형과 식생을 최대한 보존·활용해 '자연 서식지형 숲 동물원'으로 단계적으로 재구성한다.

노후 동물사부터 동물복지와 행동 특성을 반영해 개선하고, 종별 특성과 군집 행동을 고려한 서식 공간 재배치

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숲 해설 프로그램과 생태 체험형 교육 콘텐츠, 어린이 대상 동물복지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이 운영했던 시절 비싼 입장료로 지적을 받았던 만큼, 시민들에게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부산시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남권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한다. 거점 동물원은 권역 내 동물원과 수족관을 지원하고

중 보전·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현재 전국 4개 권역 가운데 청주동물원과 우치동물원 2곳만 지정돼 있다.

시는 권역 내 동물원의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중 보전·중식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지 거점 기능을 수행한다는 구상이다. 동물 교류 체계 마련과 표준 운영 매뉴얼 수립, 전문 인력 단계적 확충도 추진한다. 서울시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동물 교류를 위한 협의도 진행 중이다.

시는 지난 9일 용역비 2억원을 투입해 '동물원 정상화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올해 10월까지 중장기 운영 방향과 거점 동물원 지정 추진 방안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시장은 "4월15일 매매계약과 동시에 운영권을 인수해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시가 직접 관리에 나서겠다"며 "민간의 불안정한 운영 구조를 끝내고 책임 있는 공공 운영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경주시

20대 결혼 혼수비용 지원

경주시는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가정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20대 결혼 축하 혼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시준2'의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다. 20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초기 결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저출생 대응 사업의 일환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인 18세 이상 29세 이하 신혼부부다.

/경주(경북)=김진권 기자

산청군

1박 여행객에 인센티브 제공

산청군이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산청에서 1박해!' 프로그램을 3월부터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소규모 관광객에게 여행 인센티브를 제공해 침체된 관광 산업과 지역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3월 1일 출발 여행 건부터 적용되며 인센티브 신청은 여행 시작일 기준 2일 전까지 미리 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다른 지역 관광객 2인 이상이 산청군에서 1박 이상 숙박하는 경우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현금해 주며 최대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숙박 1박 이상, 식당 1식 이상 이용, 지정 관광지 방문이 필수 조건이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영양군

'K-브랜드 어워즈' 행정혁신도시

영양군은 25일 '2026 K-브랜드 어워즈'에서 행정혁신도시 부문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영양군의 선제적 정책 추진과 주민 중심의 혁신적인 행정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다.

군은 그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균형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2조 6000억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유치에 성공하며 ▲지원금 936억원 확보 ▲연간 14억원의 지방세 증대 ▲150여명의 상시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진주시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

진주시가 올해 전국 단위 대규모 체육대회를 연달아 개최하며 스포츠 도시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시는 오는 4월 '2026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시작으로 8월 전국펜싱선수권대회, 10월 경상남도 생활체육대축전까지 굵직한 대회를 줄줄이 치른다.

올해 최대 관심 대회는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제66회 대통령배 전국 남녀펜싱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수 선발대회다.

/진주(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충남도, 하루 1000kg 수소충전소 가동

도내 14번째 수소충전시설 운영 차량 160대, 버스 40대 충전 규모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수소교통 기반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충남도는 24일 보령시 대천동 공영 버스차고지에서 관계 공무원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교통 복합기지(수소충전소) 준공식을 열고 도내 14번째 수소충전시설 운영을 시작했다.

수소교통 복합기지는 교통 거점에 대응량 수소 충전·저장시설과 주차장, 세차장 등을 갖춘 종합형 충전 기반시설로, 총사업비 67억원을 투입해 지난해 5월 착공해 12월 준공했다. 보령시와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가

운영과 안전관리를 맡는다.

보령시 세 번째인 이 충전소는 하루 최대 1000kg의 수소 공급이 가능해 수소차 160대와 수소버스 40대를 충전할 수 있다. 도는 이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확대와 교통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도는 2030년까지 도내 어디서든 20분 이내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현재 7개 시군 13곳(25기)을 운영 중이다. 올해는 보령시·계룡시·부여군·천안시 등 4개 시군에 5곳(11기)을 추가로 준공할 계획이다.

김영명 환경산업국장은 "이번 준공으로 서해안권 도민의 수소차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전환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포항시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재정비

12억 투입해 보행환경 개선

포항을 대표하는 해안 트레킹 코스인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봄철을 맞아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정비됐다.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은 동해안 해안선을 따라 조성된 포항의 대표 걷기 코스로, 절벽과 해안 암반, 어촌 풍경을 따라 바다와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해안 경관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자원이다. 전체 구간은 1~4코스로 나뉘어 있으며, 코스마다 서로 다른 지형과 풍광을 품고 있어 다양한 걷기 경험을 제공한다.

포항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2코스 연오랑세오녀 테마공원~흥환간이해수욕장 1.3km 구간에 데크로드를 새로 설치하고 노후 데크를 교체



포항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2코스.

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해안 절벽과 암반 지형이 이어지는 구간을 중심으로 시설을 보강해 안전성을 높였다.

이번 정비로 선바위와 힌디기 등 기암 경관과 하선대 일대의 탁 트인 해안 조망, 어촌의 정취가 남아 있는 흥환간이해수욕장을 있는 구간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항(경북)=김진권 기자 jingon@

하동군, LNG복합발전소에 1.3조 투입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선제대응

하동군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할 LNG복합발전소 건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 3000억원이다.

하동군은 지난 23일 경남도청 대회 의실에서 열린 투자 협약식에서 한국남부발전과 하동군 금성면 LNG복합발전소 건립 협약서에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하동군수, 서성재 한국남부발전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경남도 내 8개 시군과 16개 기업도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하동군과 한국남부발전이 체결한 상생 협력 협약의 후속 조치다. 석탄화력발전소 폐

쇄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남부발전은 기존 석탄화력발전소 2·3호기를 대체해 약 7만 1000㎡ 부지에 친환경 LNG복합발전소를 짓는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기대 효과도 크다. 대규모 건설 공사로 지역 건설업체 참여와 협력업체 유입이 늘고, 준공 후에는 발전소 운영·유지 분야에서 안정적인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하동군은 이번 협약에 앞서 지난 5일 서성재 부사장과 함께 대통령실 기후에너지비서관을 만나 하동화력발전소 폐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 확보에도 나서고 있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북도, 해빙기 취약시설 2365곳 점검

오는 4월 10일까지 집중 안전점검

경북도는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지와 산사태 취약지 사면, 옹벽, 국가유산 등 2365곳을 대상으로 4월 10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2월부터 4월까지 얼어 있던 지표면이 녹으며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로, 시설물 붕괴와 전도, 낙석 등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높다. 도는 이 같은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기술사와 교수, 공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 방식으로 진행해 전문성

을 높인다. 위험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와 주민점검신청제를 활용해 도민 참여도 확대한다.

수시 낙석 발생 지역과 땅밀림 우려 구간, 과거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해당 지역을 잘 아는 마을순찰대도 점검에 참여시켜 현장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노후화가 심한 시설은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조치와 위험 구역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를 우선 시행한다.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